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3년 2월 22일(금) 14:00시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전력산업과 박성택 과장(2110-4897), 성시내 사무관(5529)	

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'13.2.22(금) 오전 10시 전력정책심의회*를 개최하여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(안)을 심의하여 확정

* 문승일 서울대 교수 등 11명 참석
**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'13.2.25(월)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

<추진 경과>

□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작년 5월 수급분과위원회를 개최(5.25)하여 기본방향을 논의하면서 수립 착수

○ 이후 10개월('12.5~'13.2)간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설비계획·수요계획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초안을 마련

* 소위 개최 횟수가 과거 수급계획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효율적 논의를 위해 과거 4개 소위(설비/계통/수요예측/수요관리)를 2개(설비계획/수요계획)로 통합한 결과(9.15 정전사태 T/F 건의사항)

□ 발전사업자 건설의향(총 29개사, 77405MW)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사전 공개(8.24)하고 충분한 검증('12.10~'13.1)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(평가위원회 평가 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위 개최)를 통해 반영사업 선정

○ 지역수용성* 및 계통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발전소 적기 준공을 유도

* 지자체 및 지방의회 동의, 주민동의서를 통해 평가

□ 국회 토론회·보고 및 공청회('13.2.7)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('13.2.22)를 거쳐 확정

<주요 내용>

□ **(전력수요)**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.2% 증가하여 '27년 6,553억kWh, 최대전력은 연평균 2.4% 증가하여 '27년 수요는 1억1,089만kW 전망

* 경제성장률(KDI), 인구(통계청), 산업구조(KIET) 전제 반영

○ 기준수요 전망에서 최종년도('27) 기준 전력소비량 15%, 최대전력 12%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

* 과거 계획의 수요관리 목표가 과다하여 최근 국가적 전력난이 발생하였다는 비판은 있으나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책의지를 담아 예년수준 유지

□ **(설비계획)**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기준 22%의 설비예비율 목표 설정

* 원전 안전성 강화에 따른 가동률 축소, 예방정비 확대, 수요 불확실성 등을 감안

○ 공급차질을 감안하여 390만kW의 불확실 대응설비를 별도 반영하여 총 2,957만kW의 신규설비 필요물량 도출

○ 신규 원전(600만KW)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반영유보하고, 신재생은 2027년 발전량 12%의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, 화력은 석탄과 LNG의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전원구성*

* 석탄 1,050만KW, LNG 480만KW

○ 지역수용성과 계통여건을 중심으로 신규 건설의향을 평가하여 공기업 4개사(6기, 404만kW), 민간 2개사(2기, 190만kW) 민간·공기업 공동지분참여 6개사(10기, 986만kW) 선정·반영

□ **(수급전망)** '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은 16%를 상회하여 수급불안이 해소될 전망

□ **(전원구성 전망)** 최종년도('27년)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(28.7%), 원전(22.7%), 신재생(20.2%), LNG(20.1%) 순으로 전망

○ 피크기여도 반영 기준으로는 석탄(34.7%), 원전(27.4%), LNG(24.3%) 순

* '25년 이후의 신규원전 반영을 유보하면서 신규원전 해당물량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원전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변경

<의견 수렴 과정>

□ 금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사업자 건설의향에 대한 지역수용성 평가를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,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('12.8~'13.1)

○ 각 지역의 찬성·반대단체 등은 정부 및 전력거래소에서 수십여 차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 수렴

* 삼척, 분당, 포천, 보은, 인천, 여주, 영월, 시흥, 양주, 여수, 김제 등 각지의 찬성·반대 단체 면담

□ 국회에서 토론회, 간담회, 지경위 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'13.2.7 한전본사 한빛홀에서 전력업계, 학계, 시민단체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

○ 각계의 의견은 종합검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였으며, 국회와 공청회에서 문제제기 되었던 일부 조력발전 설비*에 대해서는 일단 금번 수급계획에서 보류하고 추후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된 후 재검토하기로 결정

* 인천만조력(사업진척 없음), 아산만조력(신규추진)

<향후 계획>

□ 금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수립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,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

○ (방향)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,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

○ (절차)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수급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화

- 건설의향 조사 이전 전력수요 및 신규 발전설비 필요물량을 우선 제시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 정보제공 기능 강화

□ 향후에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7차 등 차기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

※ 첨부 :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